“70년 적대관계 종식”…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 재확인

비핵화 ‘새 방법론’ 언급없이 “안전보장” 대화동력 이어가기
‘불가침’ 대원칙 확인…조만간 실무협상서 로드맵 조율할듯

한미 정상이 23일 오후(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은 또 양국이 북한과 70년 가까이 지속해 온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북한을 향해 ’불가침‘, ’적대관계 종식‘ 기조를 밝히며 일종의 안전보장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동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회담이라는 외교 무대를 통해 안전을 약속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65분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두 정상은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실패를 딛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바텀업’ 방식의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협상을 징검다리 삼아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날 한미정상은 이 여정에서 무력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북한의 안전을 한미가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으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행동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행동’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거론한 만큼 ‘군사적 행동’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언급에는 모처럼 비핵화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 북한이 대화의지를 접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당근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결국 안전보장·적대관계 종식 등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대화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발표를 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 합의 정신 재확인·무력 불개입을 통한 안전보장·적대관계 종식 등은 북한에 대화를 이어갈 명분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됐던 비핵화 방법론에서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무협상에서의 실질적 성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이 이날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이 뭔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의제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는 체제보장이나 제재완화에 대해서도 한미정상이 똑 부러지는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미정상 논의 과정에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만 했을 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제보장에 대해서도 두 정상 간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는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진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측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세부적인 로드맵 조율은 실무협상의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소미아는 거론 안했다

양국 정상 민감한 이슈 배려
실무급서 우회적 중재 염두
한일관계 일왕 즉위식 분수령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관련 현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다른 핵심 관계자는 ‘회담에서 일본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같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을 당시 미국 정부는 이른바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미국이 불만을 표시, 한미 동맹 균열 우려마저 나온 만큼 한미 정상 간 어떤 형태로든 지소미아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총회 일정과 맞물려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각각 미국의 동맹인 한일 양국 모두에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역시 미국의 난감한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한일 양국 간 현안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우리 정부를 향해 표출됐던 미국 조야의 부정적 기류가 일정 정도 가라앉은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더라도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공개 거론하기보다는 실무급에서 우회적으로 중재역을 요청하는 방안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실제로 수면 밑에서는 미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8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돼 있다”며 “그 활동이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같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한일 관계는 냉각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도 성사되긴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일 정상의 깜짝 만남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등이 한일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나온다. /연합뉴스

백악관 “한미 정상 ‘린치핀’ 한미동맹 재확인…긴밀 소통 계속”

“방위비 협상 연내 마무리”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미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여전히 린치핀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어 “그들은 2019년 말 이전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연내 마무리를 동맹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방위비 협상은 한국시간으로 24~25일 진행되며 미 국무부는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또 “그들(한미 정상)은 또한 북한 관련 문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으며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하노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몇 달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및 이후 전개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